

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정책토론회

일 시 2023년 6월 26일 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주 최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 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후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Childcare center Safety & Insurance Association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Korea Edu-care Association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위한 해법! **유보통합!**

사회복지법인(보육법인) 목적사업(어린이집)

수행 불가시 출연재산권환원

함께 온 보육! 함께 갈 미래!

질 높은 보육·교육의 동행 동등한 지원에서 시작!!

KECA

영아보육의 중심은 가정어린이집

유보통합! 공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초석

토론회 식순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09:30~10:00	'30	참가자 접수 및 안내	
10:00~10:05	'05	개 회	이정우 민간분과위원장 (사회자)
		국민의례	다같이
		내빈소개	이정우 민간분과위원장 (사회자)
10:05~10:20	'15	개회사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환영사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축 사	국회의원
10:20~11:00	'40	발제자 소개 및 주제발표	1주제: 김익균 교수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2주제: 정호정 교수(중원대학교 아동보육상담학과)
11:00~11:50	'50	좌장 소개	좌 장: 서영숙 명예교수(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종합토론	토 론1. 공병호 명예교수(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2. 정재훈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조부경 교수(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4. 김동훈 팀장(육아정책연구소 보육정책 연구팀) 5. 이원선 본부장(한국보육진흥원 정책기획본부) 6. 전영주 원장(동화나라 어린이집) 7. 이지희 보육교사(후암 어린이집) 8. 임경아 학부모(봄샘푸르지오 어린이집) 9. 유보영 과장(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10. 지혜진 과장(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
11:50~12:00	'10	질의응답	
12:00~		정리 및 폐회	이정우 민간분과위원장 (사회자)

목 차

◎ 개회사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6
◎ 환영사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7
◎ 발제	
- 1주제: 유보통합 기관 통합 추진방향	15
(김익균 교수 /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 2주제: 보육 지속가능한 유보통합의 핵심 쟁점과 과제	27
(정효정 교수 / 중원대학교 아동보육상담학과)	
토론 1. 공병호 명예교수(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37
토론 2. 정재훈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3
토론 3. 조부경 교수(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49
토론 4. 김동훈 팀장(육아정책연구소 보육정책 연구팀)	59
토론 5. 이원선 본부장(한국보육진흥원 정책기획본부)	63
토론 6. 전영주 원장(동화나라 어린이집)	69
토론 7. 이지희 보육교사(후암 어린이집)	75
토론 8. 임경아 학부모(봄샘푸르지오 어린이집)	79
토론 9. 유보영 과장(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85
토론10. 지혜진 과장(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	91



신 동 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신동근입니다.

오늘 「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원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보육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토론회의 좌장과 발제, 토론자를 맡아 내실을 채워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유보통합은 영유아가 개인의 최종 지능 80%가 발달되는 지적발달의 결정적 시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국가적 의제입니다. 지적 성숙이 최고조에 달하는 17세 지능을 100으로 할 때, 0~4세는 지능의 약 50%, 4~8세는 약 30%, 나머지 시기에는 20%가 발달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는 영유아의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 속에서 제기되는 유보통합은 사실상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체계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차이 해소를 통해 첫 출발부터 평등을 실현해 나가는 과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유보통합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 및 부모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탁상행정이 아닌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선 현장 중심의 기반을 둔 유보통합이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여러 의견에 귀 기울이고, 대한민국 미래의 주축들을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점점 더 무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하신 내외빈 여러분과 모든 참석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6일

국회의원 신 동 근



김 경 속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안녕하십니까?

제14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김경숙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및 보육교직원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유보통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육·교육 현장에서 정말 궁금해하는 주제의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및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등을 약속하며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고 통합의 과정에서 우리 보육환경은 격변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유보통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조차 알 수 없어 피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생애 초기 영유아가 결정적 발달의 시기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국가의 형평성 있는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떤 기관에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은 시작점부터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보통합은 출발선을 위한 해법으로, 아이들이 누리는 평등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초석으로, 함께 갈 미래인 것입니다.

유보통합의 과정에서 통합된 법체계 수립, 행·재정적인 지원 등이 수반되어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듣고 모든 영유아의 차별 없는 지원과 모든 기관이 각자의 개별성을 존중받는 유보통합이 실현될 수 있는 기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또한 유보통합의 한국형 통합 모델을 제시하여 보육주도의 유보통합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가져주시고 귀한 시간을 내시어 토론회에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023년 6월 26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김경숙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존경하는 보육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먼저 「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정숙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지원체계는 유치원은 교육부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업무 영역이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학교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달리 분류되어 교사의 자격 기준과 지원 재원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선택된 기관에 따라 영유아들이 각기 불평등한 출발점에 서게 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작금의 상황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보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보육기관 당사자와 각 부처 간 견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단순 행정적 통합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마련된 시의적절한 토론의 자리를 통해, 향후 유보통합의 나아갈 방향과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여러분의 해안을 기반으로 아이와 보육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미 있는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6일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축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준비한 「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위해 애쓰신 한국 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보육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는 나이지리아 속담이 있습니다. 미래의 꿈나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국가, 지자체, 부모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부모의 책임과 역할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시설에 다니든지 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질 좋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관리하는 이원화 구조를 통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여건에 따라, 선택하는 기관에 따라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보육과 교육이 달라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모든 영·유아가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교육의 기회 균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높인다면, 저출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아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을 만드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민석입니다.

『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정책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유보통합은 어렵지만 가야 할 길입니다. 어린이와 학부모, 그리고 어린이를 돌보는 교사 모두가 수궁할 수 있고 만족하는 유보통합의 길을 찾기 위한 토론의 자리를 위해 노력해주신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감사드립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관리·감독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선택하는 기관에 따라 영유아는

다른 출발점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보통합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실질적인 강화가 달성되어야 합니다.

저출생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위기때문에 유보통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 상황 때문에 유보통합의 목표가 어린이를 위한 보다 나은 보육과 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잊혀서는 안됩니다.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의 발달과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국회, 사회 등 국가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 합니다.

오늘 자리가 유보통합의 방향을 논의하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인 기관의 통합 방향과 교사양성 및 자격 제도에 대해서 발제를 맡아주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김익균 교수님과 중원대학교 아동보육상담학과 정효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계, 정부, 학부모, 교사 등 유보통합에 대해서 전문성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의 토론을 통해서 현재의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향후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건설적인 합의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을 경청하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조율하고 협의해서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국회의 존재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오늘 전문가분들께서 논의해 주신 소중한 고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민석

축사



윤영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산시 갑구 국회의원 윤영석입니다.

〈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일선 보육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루게 될 유보통합은 그간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해묵은 과제였습니다. 최근 합계 출산율 0.78명의 역대 최저출산율 및 인구감소로 급변하고 있는 사회 국면에서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이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식적·행정적으로 영킨 실타래를 풀어가야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유보통합의 실현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 제시와 건설적인 제언이 도출되기를 기원합니다.

저 또한 보육현장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살피는 가운데 보육현장 개선 및 선생님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0~2세 기관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를 5%로 추가 인상하는 한편 어린이집 원장·교사 겸직자에 대한 수당도 늘려 총 250억원의 예산을 증액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심사중입니다.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6월 26일

국민의힘 양산시 갑구 국회의원 윤영석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의미있는 토론회 자리에 개최해주신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토론회를 준비하여주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교육을 제공하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영유아보육과 교육의 통합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실행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담은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였고, 관계부처 합동 유보통합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4월에는 영유아 부모님,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자들과 교사, 지자체·교육청, 학계 및 정부 관계부처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했고, 그 외에 다양한 채널로 각 계 입장을 수렴하는 등 유보통합을 위한 일정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 놓여있는 아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발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보통합이 필요한 것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만, 여러 당사자들의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인해 과거 정부에서는 유보통합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영유아 발달 특성상 보육과 교육이 모두 중요하며 유기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적용법률, 제공인력, 운영체계, 지원구조 등이 상이하여, 유보통합 방식에 있어 이견을 좁히기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려는 유보통합의 목적을 적기에 실현하고자, 각 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조율해나감에 유보통합을 추진하려 합니다.

정부의 공식적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현장의 당사자분들이 모여서 생생한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장에도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 토론회에서는 현장과 학계를 비롯한 보육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육의 가치가 유보통합 과정에서 교육의 가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오늘같은 논의와 토론의 결과가 ‘유보통합’을 위한 자양분이 되어, 모든 아이가 공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축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입니다.

「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을 주제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님과 행사를 주관해 주신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님, 그리고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미래 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최상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그 방안에 따라 먼저 정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연말까지는 ‘통합기관 모델’의 시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수준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보통합은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학부모 등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이 논의되고 제시되길 기대하고, 특히 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에 대한 소중한 제안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유보통합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어린이 교육·돌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6월 2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발제 · 1 주제

- 보육의 입장에서 보는 유보통합 기관 통합 추진방향 -

김익균 교수(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보육의 입장에서 보는 유보통합 기관 통합 추진방향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김 익 균

유보통합은
행정편의나 예산으로 접근하지 않고
오로지 영유아를 위하여 접근



Contents

I. 들어가면서

II. 유보통합의 과정과 추진방향

1. 유보통합의 추진과정
2. 추진방향의 현황과 진단
 - 1) 정의와 대상의 통합
 - 2)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형의 통합
 - 3) 어린이집과 유치원 설립기준의 통합

III. 결론 : 현실적인 통합방향



I. 들어가면서

유보통합은 현재 이원화된 행정 체계를 단일화 하여 모든 영·유아의 보육·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유보통합의 길은 힘든 일정이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해소와 질적향상을 위한 목적 하에 진행되어야 함

우리나라의 유보통합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제3의 길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정책의 접근방향의 모색

외국의 선례는 우리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의 모형 개발이 필요

30년 동안 정착된 제도의 변화는 많은 갈등해결과 전제 작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함

II. 유보통합의 추진과정과 추진방향

1. 유보통합의 추진과정

- ❖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부모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의 형평성, 기관 선택의 혼란 등의 문제를 야기함
- ❖ 윤석열 정부는 이원화 된 두 기관의 통합을 우선으로 하는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교육부는 1월 30일 유보통합(유치원, 어린이집 기관통합) 추진단 출범과 함께 교육부로 관할부처 일원화를 발표함
- ❖ 교육부는 해당방안에 유치원, 어린이집 외 제3의 통합모델구성과 함께, 교사 및 기관 관리체계 등의 통합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을 발표함

II. 유보통합의 추진과정과 추진방향

1. 유보통합의 추진과정

현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내용(안)

비전	출생부터 국민인식 책임교육돌봄	
목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단계적으로 통합, 모든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을 지원	
전략	[1단계]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일체성 통합 기반 마련	
	[2단계] 교육부 교육형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 본격 시행	
학부모	1단계(23~24)	2단계(25~)
	단계적 교육돌봄 부담 완화 차우 개선, 자격양성 체계 개선방안 마련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개편된 자격양성 과정 적용
교사	안전한 환경 조성	시설 기준 개선안 적용
	스	스
조직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일원화된 관리체제로 통합 지원
재정	재원 이관 및 통합 추진	통합된 제정으로 운용
법령	관련 법률 일괄 재개정 추진(23)	특례법 법률 시행

II. 유보통합의 추진과정과 추진방향

1. 유보통합의 추진과정

단계별 추진방향

1단계 : 격차해소 및 통합기반 마련

-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 교육비 등 학부모 부담 단계적 경감 추진
-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 기반 마련
-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구상

2단계 : 유보통합 본격 시행

- 지역 주도의 새로운 통합기관 출범 · 운영
- 핵심 서비스 통합 및 단계적 적용

II. 유보통합의 추진과정과 추진방향

1. 유보통합의 추진과정

유보 통합 1단계

교육비 부담, 통원시간 확대 등 유치원 이전(15)간 교육비 부담 격차 해소할 수 있는 교육비율 우선 추진합니다.

격차 완화 위한 선도교육청 운영 : 교육비 교정 지원, 통원시간 확대 추진(2024년 후반기 중) 등 주요 과제 집중 추진합니다.

학부모 부담 경감 : 교육비, 입학금 지원 확대(2023-24) 및 통원시간(2024년) 확대 추진

유보 통합 1단계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업무와 역할 중심의 고령화 통합기관을 단계적 통합기관을 추진합니다.

관리체계 통합 : 교육부 시도교육청별별 관리체계 통합

통합기관 모델 수립 : 지역별(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한 통합기관 모델을 수립하고, 2024년 중 지역 교육청에 적용

유보 통합 2단계

1단계 논의 결과를 전제로 새로운 통합기관 형태 유지하고 이전(2025년)을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통합을 본격 시행합니다.

지역 주도 통합기관 운영 : 교육부 시도교육청 주도 통합기관 운영

교사 자격제도를 개편한 적용 : 현행에서 현행 교사 자격 상이하게 교육과정, 시·도별 교육과정 등 단계적 적용

통합기관 모델
정책연구 추진

교사 양성 및 자격 개편
방안 마련

시설기관
개편 방안 마련

표준교육과정 및 누리과정
개편 연구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 (2023. 1. 30), 충청부처 국민안심 책임교육·유보 유보통합 추진방안.

II. 유보통합의 추진과정과 추진방향

2. 추진방향의 현황과 진단

1) 정의와 대상의 통합

(1) 현황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 1. “유아”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업성격 차이의 문제
- ❖ 사회복지서비스와 교육에서 출발한 성격차이의 문제

II. 유보통합의 추진과정과 추진방향

2. 추진방향의 현황과 진단

<표 1>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비교

구분	유치원(유아교육법)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대상	만3세부터 취학 전 아동	6세 미만 취학전 아동(12세까지 연장 가능)
기관성격	학교	사회복지시설
관리 체계	관리 부처	보건복지부 - 시·도
	지원 조직	한국보육진흥원(준정부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중앙·지방)

II. 유보통합의 추진과정과 추진방향

2. 추진방향의 현황과 진단

1) 정의와 대상의 통합

(2) 진단

가칭(유보통합기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서비스 - 복지재정·제도 -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 교육재정·제도 - 설치기준

II. 유보통합의 추진과정과 추진방향

2. 추진방향의 현황과 진단

1) 정의와 대상의 통합

(2) 진단

- ❖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두 유형이 어떠한 방향으로 통합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임
- ❖ 사회복지서비스를 실현하는 영유아보육법과 교육기능을 실현하는 유아교육법의 통합은 실천적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음
- ❖ 이원화에서 일원화로 통합된 사례가 많이 있으나 우리의 실정과 매우 상이함으로 참고하기에는 한계가 많음
- ❖ 교육계열로 통합한 나라(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 복지계열로 통합된 나라(독일, 핀란드 등)



II. 유보통합의 추진과정과 추진방향

2. 추진방향의 현황과 진단

2)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형의 통합

(1) 현황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II. 유보통합의 추진과정과 추진방향

2. 추진방향의 현황과 진단

2)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형의 통합

(1) 현황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II. 유보통합의 추진과정과 추진방향

2. 추진방향의 현황과 진단

<표 2>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 및 설치기준 비교

구분	유치원(유아교육법)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시설	국립/공립/사립유치원	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 보육시설	
인가	시·도 교육감(국립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시설임대	불허(사립 교지와 교사는 소유 주체와 설립주체 일치)	제한 없음	
시설처분	매매 불가 및 매도·담보제공 금지	제한 없음(단, 사회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 양도불가, 가정/민간은 토지건물 소유권·전세권 부채비율 100분의 50미만 허용)	
재정지원	재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항목	유아학비('22년 28만원) 방과후과정비('22년 7만원)	보육료('22년 28만원) 교사 처우개선비, 기관운영비 일부 등

II. 유보통합의 추진과정과 추진방향

2. 추진방향의 현황과 진단

2)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형의 통합

(2) 진단

```

    graph LR
      A[공립유치원] --- B((통합))
      C[사립유치원] --- B
      B --- D((통합))
      E[인건비지원 어린이집  
- 국공립 어린이집  
- 법인어린이집] --- F((통합))
      G[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F
      F --- D
  
```

- ❖ 실질적인 유보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이 준비되어야 함
- ❖ 먼저 유치원과의 통합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유형 간의 통합이 먼저 진행되어야 함
- ❖ 장기적으로 완전한 통합을 위한 준비단계를 설계하고 접근해야 함



II. 유보통합의 추진과정과 추진방향

2. 추진방향의 현황과 진단

3) 어린이집과 유치원 설립기준의 통합

(1) 현황

- ❖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



II. 유보통합의 추진과정과 추진방향

2. 추진방향의 현황과 진단

3) 어린이집과 유치원 설립기준의 통합

(2) 진단

-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설립기준은 학교라는 기준과 아동복지기관이라는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
-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유치원의 설립기준은 출발점부터 상이함으로 통합 시 그 특징을 고려하여 통합을 진행해야 함
-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설립기준의 통합과정은 매우 신중하고 절차적으로 접근해야 함
-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설치기준의 통합은 통합을 위한 철저한 준비단계가 전제되어야 함

Ⅲ. 결론 : 현실적인 통합방안

유보통합안



- ❖ 유보통합은 보육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함
- ❖ 유보통합은 교육으로 통합한다는 가정하에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가능한 영역부터 통합하고 그 이외의 논쟁의 쟁점은 점진적으로 통합



발제 · 2 주제

- 보육 지속 가능한 유보통합의 쟁점과 과제 -

정효정 교수(중원대학교 아동보육상담학과)

보육 지속 가능한 유보통합의 핵심 쟁점과 과제

정효정(중원대학교 교수)

I. 들어가며

공정과 상식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당선된 윤석열 정부는 11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과제 46)과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과제84)를 포함하고 있다. 임신·출산에서부터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소외계층 없는 맞춤형 교육과 평생학습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과 보육에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있는 유아교육 체제의 통합으로 질적 향상을 꾀하여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 없고 균등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이용 편의성과 기관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2023년 4월, 교육부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 위원으로 하여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교원·교사, 학부모, 학계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후속조치로 유보통합 관련 실질적 연구를 위해 “조직·재정분과, 교원자격·양성체제분과, 교육과정분과 그리고 통합모델분과로 나누어 ”아이행복연구자문단“을 구성했다.

그 간 1995년 김영삼 정부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유보통합 논의는 30여년 가깝게 지속되어 왔으며 문재인 정부 때는 유보통합을 준비하는 유보격차해소를 표명했다. 보육과 유아교육의 관련법이 중복되고 교육과정(누리과정)은 일원화되었으나, 서로 다른 소관 부처 및 행·재정체계, 관련 규정 등의 차이로 수요자의 불편은 물론 업무수행의 비효율성과 비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여전히 60여 년이 넘게 발전·지속해 온 양 기관의 입장 차에서 발생하는 쟁점과 한계점 극복이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저출생률을 비롯한 작금의 급변하고 있는 유·보육환경을 고려한 통합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본 토론회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교육 기능에 초점을 둔 통합 논의에 우려를 표하며 영유아발달 단계적 특성은 물론 시대적·사회적으로 절대 필요한 보육의 정체성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 가장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교사자격 통합 방향과 보육행정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1. 유보통합의 시대적 필요성 및 당위성

- 어린이집(보호와 교육)과 유치원(교육과 방과후 돌봄·종일제 운영)의 기능 유사성
 - '22년 현재, 전체 유치원의 99.8%에서 방과후 과정 운영, 전체 유아의 89.1%가 참여(제3차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 이미 국가수준의 만3~5세 공통교육과정(누리과정) 실시, 정보공시 등 통합 운영
- 유아교육 체제의 이원화로 인한 행·재정적 비효율성 및 지원격차 문제 해결 필요
- 교사양성체계 및 자격제도의 차이 해결 필요
-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기회 부여는 헌법적 권리(출발선 평등의 원칙, 비차별적 원칙)
-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 제정의 근본 취지인 영유아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영유아 중심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냉철한 평가와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OECD는 영유아 교육·보호를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로 공식 지칭하고 통합을 통한 행·재정적 및 인력배치의 불균형 극복 권고(2001년~)
- 유럽연합 대부분의 국가는 0~만5세 보호와 교육을 교육부로 이관, 교육복지적 관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UNESCO도 보호와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로 이원화 시각을 극복하고 영유아를 위한 통합 권고함(2012)
- 공정과 평등을 기치로 현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천명함
 - 국가책임제 교육격차 해소(0~만5세 영유아 단계적 통합 마련)
 - 영유아에게 비차별적, 균등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부모 이용 편의성 및 기관 선택권 보장

2. 유보통합 추진 목표 및 방향

- 영유아 최우선 원칙의 가치 지향 및 사회적 합의가 강조된 통합
 - '아이 기르기 좋은 사회'에서 '아이가 행복한 사회'로 인식 전환
- 모든 영유아에게 공정한 출발선 보장 및 균등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유치원의 질 관리의 효율성 및 서비스 질 제고
 - 취학 전 영유아기 교육체제의 전반적인 개혁의 분기점(심리·사회·정서발달을 기본으로 한 잠재가능성, 자율성, 창의성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 및 체제 전환)
 - 인적·물적환경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질 관리(교사 대 아동비율, 기관 수급 조절 등)
- 행·재정 지원의 격차 해소 및 효율성 증대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재정지원 격차해소로 형평적 재정 건전성 확보가 선결과제
 - 행·재정적 지원 통합이 기관의 질적 향상으로 연동되어야 함

■ 통합 교사양성체계 및 자격제도 도입으로 교육격차(전문성 논란) 왜곡 불식 시급

■ 부모의 양질의 기관 선택권 보장 및 확대

-보육의 절대적 필요성은 시대적, 사회적 기류임

-2022년, 어린이집(30,923개소, 1,091,400 원아/국공립 5,081개소, 275,644원아),
유치원(8,562개소, 552,812원아/국공립 5,113개소, 385,327원아) 현황을 통해 부모
선택권에 주목

3. 유보통합의 핵심 쟁점 및 과제

1)보육의 정체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요망

■ 유보통합에 따른 0~만 5세 대상 비전과 로드맵 제시가 급선무

-통합 후, 유·보육환경 변화 및 효과, 개선되는 내용 등에 대한 비전 제시 시급

-현재 일정만 공개, 관리체계통합 방안('23년6)→서비스 격차완화 방안('23년8월)→

교사자격·양성개편 시안 및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제시('23년 말)→'24년 방안 마련

-재정지원 계획에 영아는 제외된 상태, 교육·보육료지원 만4~5세('25년), 만3~5
세('26년)/ 돌봄 지원비 만4~5세('25년), 만3~5세('26년)

■ 교육부에서 제시한 문건에는 '교육과 돌봄'으로 명시, '보육' 용어가 전무함

-법적 용어에 따라 행정집행 기준, 정책결정 과정이 매우 달라질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2조2항에는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며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영유아기 '교육'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새로운 통합기관은 영유아발달 등을 고려한 새로운 교육·돌봄체제 마련으로
연급하고 있음

-교육부는 교육/ 보건복지부는 돌봄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한 논의 필요

-'돌봄'이란 용어가 과거의 단순돌봄, 종일돌봄으로 인식·왜곡될 수 있음

-"전문적 돌봄(전문적보호)=영유아기 교육"의 동일선상과 연속성으로 등치되는 영유
아기 발달특성을 고려한 '보육'용어 삽입 필요(교육복지적 관점)

-교육부(유보통합 추진단)의 보육기관의 정체성 인식 및 공유 급선무(즉, 어린이집은
전문적돌봄을 수행하는 교육기관/교육이 수반되는 전문돌봄기관 임)

-따라서, 통합기관의 명칭에도 보육의 정체성과 중요성을 내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육의 강점이 유지· 발전하는 교육복지관점의 '한국형 유보통합 모델'구축 방안

-유·보육의 OECD공식 명칭인 ECEC의 Care 의미와 우리나라 '보육(보호+교육)'의
의미는 매우 다름

- 예컨대, 보육교사자격의 국가자격증화/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 제정 및 운영/ 국가차원의 질관리(평가제)/ 보육교직원 법적 교육(보수교육)의무화를 비롯해 정부 중장기보육발전계획 수립과 내용에 따른 지속적인 질적 전환 및 개선 견지
- 탁아(1960년대)의 태생적 배경이었던 요보호 아동 대상뿐 아니라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서비스로 안착되었음, 현재 유치원의 두 배 이상의 영유아와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있음
- 국가책임보육, 수요자중심보육에 입각한 다양한 보육유형(취약보육 등)운영이 불가피함 (수요자의 니즈에 대처하는 보육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 추세)

■ 보육공급 지원기관(인력)인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보육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요 보육지원체계임

■ 교육 기능이 강조 된 유보통합 방향 우려

- 통합의 주무부처가 교육부이기 때문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위험
- 교육기능에 초점을 맞춘 유보통합 방향은 영유아기 발달특성을 간과, 영유아 권익에 충돌하는 결과 초래
- 영유아의 심리·정서발달 보다는 인지발달에 매몰될 수 있음
- 최근 일반적 교육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계성영유아(장애위험영유아) 증가 추세
- 교육은 유치원/돌봄은 어린이집이라는 고착된 시각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합 목표로 인식하고 있는바, 보육의 정체성이 간과되고 있음
- 즉, 어린이집의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통합기관의 질적 개선이며 유보통합의 목표로 왜곡되고 있음
- 이와같은 영유아기 '교육'의 정체성 혼란과 교육격차 해소 강조로 조기교육 열풍과 다 촉진 우려
- 점차 기관 유입의 저연령화(0·1·2세) 추세로 전문적돌봄과 교육은 동일선상이며 불가분의 관계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0~만5세아 발달의 연속성을 이해하고 포괄하는 통합 추구
- 특히, 영아보육의 중요성 및 전 생애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되는 유보통합 요함
- 00학교=학습강조 분위기 경계, 즐겁고·안전하고·행복한 일과를 경험하며 양질의 상호작용 및 언어적 자극을 통해 교육적 경험으로 이어지는 통합기관의 성격 규정 (정체성 확립)이 절실
- 영유아기 전문적보호와 교육의 확고한 신념과 가치는 세부적인 기관 운영(시간, 내용, 방법 등)에 영향을 미치며 운영의 우선순위를 결정함
- 외국의 사례도 교육부로 통합 추세이나 전문적 돌봄을 중시(교육복지관점)
- 필요 시, 자격취득 절차를 거쳐 어린이집을 유치원으로 전환하거나, 어린이집 교사(원장)은 유치원 교사(원장)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견은, 양 기관의 계층화 및 대립을 고착시키는 논리로서 지양되어야 함

2)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 통합 시급

- 보육교사 양성체계의 현실적인 문제점 인식
 - 전문가로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업연한, 교육수준, 관련 자격 전공여부 중요
 - 현행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법적 기준 삭제 시급, 대체로 보육교사는 대졸이상(전문대 포함, 75.2%)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나 여전히 비전문가로 사회적 낙인효과 크게 작용,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자격과의 연동 불가 요인
 - 보육학과제 도입 지연은, 보육환경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정부 실책
 - 보육교사교육원(보육교사 3급 취득),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취득교사의 현안 속의
 - 정규담임제와 비담임제 구분 검토(현실적으로 위계적 차등관리 필요성 제기)
- 동일 조건에도 교원(유치원교사)과 근로자(어린이집 교사)로 나뉘는 현행 법적 불합리
 - 교사 개인적 역량보다는 법적 기준에 따라 구분(분리)되고 있음
 -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양성체계 이원화로 영유아들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헌법 31조)"를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나, 또 교사 자격통합이 교사 및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시각은 양 기관의 갈등 주 요인이 되고 있음
 - 어린이집과 유치원/보육교사와 유아교사 간 계층화 경계, 예컨대 유치원 교사 자격이 보육교사 자격의 상위자격으로 왜곡되는 상황 초래
 - 어느 한쪽 일방으로 흡수 또는 수용 편입이 합당하다는 인식을 야기할 수 있음
- 가칭 '통합영유아교사자격' 체계 도입으로 동일수준의 자격과 신분 도입이 시급
 - 유보통합추진위는 '23년 말까지 교사자격·양성개편 연구 및 시안 발표 예정
 - 교사 양성과정 개편 등('25년)→ 양성과정 적용('26~), 경과조치 시행
 - 기존 법적 기준에서 탈피한 자격과 신분 취득을 위한 논의가 관건
 - 자격기준과 급수체계 등가 인정(통합자격취득경로)
- '새로운 통합기관'에 합당한 교육복지 관점의 교사자격 통합 안 시급
 - 수업연한은 4년제 학사학위 과정 기준이 세계적 추세
 - 통합 학과명, 교원 기준, 교과목 개설 기준, 교사 소양교과목 이수 기준, 졸업 자격 검정 기준, 실습관리 운영 안 등 필요
 - 0~만 5세를 아우르는 복지(보호프로그램) 및 교육 교과목 구성
 -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신체·언어·심리정서·사회·인지영역)을 지원하는 전공교과목
 - 영아기 전문적돌봄과 교육 수행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목 구성
 - 영아와 유아 대상은 물론 부모,지역사회,사회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 운영
 - 영유아교사에게 적절한 교직과목 운영(교사 인성· 자질· 소양·윤리· 철학 등 포함)
- 현직 보육교직원(교사,원장)/ 유치원 교원(원장) 간 경과조치의 합리적 방안 합의
 - 양 기관의 현직교사 경과조치 방안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완
 - '자격 전환'이 아닌 기존 자격에서 보완하는 방안
 - 현직 보육교사의 국가 자격취득과정을 존중하는 보완체계 마련
 - 보육교사의 교직 관련 교과목 보완/유치원교사의 영아보육 및 아동복지 관점의 교육연수 기회 부여 방안 협의

■ 교사처우 및 급여체계의 개선

-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및 교사처우 개선 가능(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대상)
- 통합 시 자격 과 신분에 대한 솔직한 논의 필요(국공립, 단설/사립유치원, 어린이집)
- 통합 시 교사 자격 및 신분에 따른 처우(급여체계)의 차이는 갈등의 계기
- 통합 시 보육교사의 동기의욕 약화, 상대적 박탈감을 경계

3) 조직 및 행정체계 일원화

■ 중앙부처 관리체계 일원화의 연장선상에서 지방행정전달체계 보육담당 인력배치

-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보육행정 업무 인력 배치 필수
- 교육청의 교육내용, 학부모 관리, 교직원 연수 및 상담, 안전관리 분담 참조
- 현행 시도 보육업무 담당자는 순환직으로서 보육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은 숙원 과제임

■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이 통합된 법령 확보로 행정 집행

■ 영유아기 전문적 돌봄과 영유아기교육을 아우르는 독립적 행정전달체계 확립 필요

II. 나가며

60여 년이 넘도록 유지해 온 양 기관의 상이한 입장 차에서 발생하는 쟁점과 한계점을 인지하고 이해 당사자의 설득과 합의 도출로 성공적인 유보통합이 실현되어야 한다.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사항을 수시로 공개하여 기관 이용 부모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으로 절차의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예컨대 통합 추진사항의 정보공유로 이해 당사자 간 소통과 협력, 그리고 상호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유보통합이 대외비로 진행되었을 때, 소수 정책 입안자들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추진이며 소통 부재라는 비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 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각각 설립목적에 근거해 사회 국가 책무인 양육지원을 대신해서 수행해 왔음을 인정하고 현장의 욕구와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기점으로 어린이집은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기인하여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영유아 교수·학습 방법에 주력해 왔다. 단순한 돌봄의 차원을 넘어 영유아의 건강, 영양, 안전, 그리고 부모상담 및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등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무엇보다도 보육수요자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보육유형을 개설하여 가정양육 및 가족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30여 년 동안 막대한 재정으로 심혈을 기울여 발전해 온 우리나라 보육 관리체계와 보육전문가로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지할 수 있는 교육복지 관점의 한국형유보통합모델이 구축

되어야 한다. ECEC의 총체적 관리와 전문화가 세계적인 동향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디 영유아중심·영유아권리존중에 우선한 전문적인 돌봄, 전인적 교육으로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유보통합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22. 제3차(2023-2027)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교육부. 2023. 유보통합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안).
 보건복지부. 2022. 제4차(2023-2027)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
 장영인. 2023. 유보통합 시 영유아기 보육의 필연성과 지속성 확립.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정효정. 2022. 아동권익관점의 유보통합을 위한 논점과 제언. 한국영유아보육학, 136:77-101.
 정효정. 2022. 한어총민간분과위원회 임원연수 특강자료.
 정효정. 2023. 한어총국공립분과위원회 임원연수 특강자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23. 지속가능한 교육복지 관점의 한국형유보통합모델 구축 방안.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토론 1

- 유보통합의 쟁점들에 대한 토론 -
공병호 명예교수(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유보통합의 쟁점들에 대한 토론

공병호(오산대학교 명예교수)

두 분 교수님의 발표는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유보통합을 논의하는데 있어 다양한 분야의 쟁점과 과제, 방향성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과 내년은 보육과 유아교육의 프레임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지난 30여 년 간의 논쟁을 마무리할 중요한 과도기가 될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형태는 제각기이며, 설립 형태에 따른 차이가 기관 경영 및 교사 고용 안정화의 문제, 이로 인한 교육서비스의 차이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취학 전 돌봄 체계에 대한 통합이라는 당면 과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유보통합에 있어 우선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즉, 0-5세 영유아를 위한 국가수준의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영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기존 영유아교육기관을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용자와 공급자간 비형평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국공립기관과 민간(사립)기관 간 불합리한 제도적 차별 관행을 개혁해야 합니다. 나아가 아동별 재정지원의 확대와 불공정 경쟁조건의 제거를 통해 기관 간 비형평성을 해소해야 한다. 이는 육아행정과 재정의 효율성과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영유아 교육을 위한 독립된 기관을 설립하여 전문화함으로써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책임은 점차 교육부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덴마크에서는 ‘고등교육 및 과학부’(Ministry of Higher Education & Science)와 분리된 ‘아동·교육부’(Ministry of Children & Education)에서 ECEC를 담당하고 있는데, 국가가 통합기관의 형태를 규정하고 강제하기보다는 지역적 특성이나 기관의 여건에 따라 개별 기관이 자유롭게 기관의 유형을 선택하고, 자유경쟁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덴마크의 사례를 볼 때 유보통합을 일원화라는 개념에 얽매이지 말고, 다차원적, 연속체 상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¹⁾ 단, 선의의 경쟁을 위한 공급자간 비형평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선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체제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지자체의 효과적 기능분담을 위해 지자체가 담당하였던 재정의 시도교육청으로의 예산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 등 재정지원에 대한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

1) 한유미, 유보통합 시 영유아기 보육의 필연성과 지속성 확립에 대한 토론,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23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32-36. 참조.

입니다.

한편,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요소로 교사의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유능한 교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양성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사, 교육프로그램, 교육시설의 질 균등화를 추구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양성체계의 차이로 격차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양성체계는 개방형 양성체계로, 보육교사의 학력 수준, 전공 등의 배경이 다양하여 교사의 질을 균등하게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폐쇄형 양성체제인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18-2022)에서도 보육교사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규자격과정은 학과제 방식으로 개선하며 적정 처우보장과 함께 유치원 교사와의 격차해소를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²⁾

하지만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더 나아가 통합 자격을 전제로 쟁점과 과제들이 부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통합 학과명, 교원 기준, 교과목 개설 기준, 교사 소양 교과목 이수 기준, 졸업 자격 검정 기준, 대면교육 운영 기준, 실습관리 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규 통합 자격 교사들의 교육 연한(3년 또는 4년), 기 취득자들에 대한 사후 조치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표는 OECD 국가별 영유아 교사 최소 학력 단계와 한국의 해당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 2) OECD 국가별 영유아 교사 최소 학력 단계(n=35개국)

구분	국가 수(%)	한국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3급	2급
ISCED 6단계(학사학위 이상)	29(82.9%)	○		○
ISCED 5단계(전문대 이상)	6(17.1%)	○		○
ISCED 4단계(고등학교 이상)	1(2.9%)		○	
ISCED 3단계(중등학교 이상)	1(2.9%)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20).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도입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신규 교사 양성 연한은 일정 시기를 출발점으로 제도를 확립하고, 이에 따른 양성기관의 체제를 갖추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기 취득자들에게 예를 들어 4년제 학위를 요구할 경우, 1년제 보육교사교육원 출신자들, 2~3년제 전문대학 출신자들의 재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중등 교사와 달리 방학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와 병행되는 학위 취득의 과정에서의 부담과 피로감이 영유아의

2)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도입방안 연구, 2018.11., 조용남, 학과제 방식 도입 연구용역 결과 발표 자료.

교육에 전가될 질 저하의 우려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 정책의 전환으로 기득권이 상실되는 것에 대한 법적 논쟁이 제기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합의를 전제로 다양한 재교육 방법이 요구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기관으로 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시설 설립·설치 기준의 마련입니다. 양 기관은 이원화로 인해, 그리고 제반 구성의 특성으로 인해 설립·설치 기준도 서로 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기준, 평가체계, 지도·감독, 건강·급식·안전 관련 환경 조성의 기준 등도 달랐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선도교육청’사업을 통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보통합 서비스 적용을 위한 각 기준 등의 선결과제의 우선순위가 제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특히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설치 기준에 있어 부채의 인정 문제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유치원의 경우, 설립에 있어 부채를 인정하지 않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부채비율 상한 50%를 인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운영비에서의 이자 지출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의 통합 시, 어떠한 경과조치를 통해서든 어린이집의 부채비율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없애야 할 텐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장의 현실일 것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비용지원 격차와 관련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유치원의 경우, 병·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되고 비용 지원에 있어서도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7개의 설립유형마다 비용 지원에 있어 기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미지원 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지역 특수시책에 따른 어린이집, 각 지자체의 보육비용 지원을 위한 특수시책의 차이 등 경우의 수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비용 지원의 격차해소를 논하기 전에 어린이집 간, 유치원 간 설립 형태에 따른 비용 지원의 격차를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간식비, 방과 후 과정 비용, 추가수업료(인상비율 규제), 특별활동비, 차량 등 기타 비용 등 어린이집 유형별,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격차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치원의 경우, 병·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비용 지원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합된 모델에서도 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유보통합의 대전제 속에 이해당사자들의 회계투명성을 위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즉, 복식부기의 도입, 토지·장치 등 시설자산(자본비용) 사용료 지급인정, 상근대표자(경영자) 인건비 지급인정, 결산 후 손실금 또는 이익금을 표시한 결산재무제표 작성의 허용 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통재무회계규칙을 합리적으로 만드는데 고려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법령에 의한 병·단설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의 난립도 향후 유보통합의 논의에 있어 논란이 될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기꺼이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취학 전 보육과 교육을 담당해 온 미지원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들이 유보통합의 과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시적으로라도 관련 법령의 유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토론 2

정재훈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memo

memo

memo

memo

토론 3

- 영유아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과 과제 -
조부경 교수(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토론: 영유아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과 과제

조부경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지난 30여 년 동안 가다 서다를 반복했던 유보통합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그동안 통합의 논의에서는 통합의 개념이나 범위, 근원적인 목적 등과 같은 가치지향적인 측면(이정옥, 류승희, 임수진, 2018)보다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현실적 필요와 실사구시적인 동기에 의존한 측면(장영인, 2014)이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시기로서 이런 때일수록 각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유보통합의 궁극적인 목적과 본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여기에 비추어 추진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김익균 교수님께서 1주제 말머리에 “행정편의나 예산으로 접근하지 않고 오로지 영유아를 위하여 접근”하자는 대전제와 정효정 교수님께서 2주제에서 지속 가능한 유아교육과 보육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보통합의 미래가 밝으리라 확신한다. 앞으로도 영유아의 행복하고 질 높은 삶을 위한 다양하고 풍성한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하며, ‘영유아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나아갈 길에 대해 의견을 간략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하고자 한다.

1. 유보통합의 본질: 영유아의 질 높은 삶 지원

통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통합을 하고자 하는가?’, 그 본질에 대한 관점을 놓치지 않고 쟁점을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유보통합의 궁극적 목적은 아이들에게 있다. 모든 영유아가 현재는 물론 지속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한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즉,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여 출발선의 평등과 개인 성장의 최적화를 목적으로 한다(임수진, 류승희, 이정옥, 2017; 조부경 등, 2012; 최은영, 2015). 만일 이와 같은 목적이 현 이원화 체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구태여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이원화 체계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자의 고유성을 토대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누리과정 통합 등의 일부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다만 서로 다른 행정체제 하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영유아의 질적인 삶을 지원하는 데에 어려움으로 작용해 온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모든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과 최선의 이익 추구, 영유아의 발달과 경험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영유아를 위한 일원화된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다(송치숙, 2021; Kaga, Bannett, & Moss, 2010; Moss, 2015; OECD, 2015). 영유아에게 교육과 돌봄은 분리하거나 단절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이와 더불어 유보통합은 그 자체로 목적이라기보다는 영유아의 행복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늘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보통합이 과연 영유아의 발달의 최적화를 위한 유일한 방안인지, 주무부처를 일원화함으로써 오히려 행정편의주의가 강화되어 개별성과 다양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제도를 통한 교육 격차보다는 교사 개인의 전문성의 격차로 인한 교육 격차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등 유보통합이 달성한 이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 성찰할 필요가 있다.

2. 유보통합의 방향

1) 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돌봄기반교육: 존재론적 관점에서의 교육

‘교육’과 ‘보육’의 용어에 대한 합의된 관점을 정립하지 못한 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원화 체계 속에서 발전을 해왔기에 통합의 과정에서 이 용어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은 오랜 기간 갈등을 야기해 왔다. 정효정 교수님의 원고에서 그동안의 고민과 앞으로의 우려를 잘 지적해주셨다고 본다. 인식론적 관점이나 인지적 측면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것이 보편화된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대체로 협의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유아교육은 원래부터 존재론 또는 존재론적 인식론에 보다 가깝게 이해되어 왔다.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생활을 통합적으로 보며 삶을 앞으로 보고자 했고, 유아의 존재 그 자체인 놀이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가치를 두어왔다. 법적으로도 교육과 보육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보여 왔다. 유아교육의 법적 근거가 된 1949년 제정 「교육법」 146조에는 “유치원은 유아를 보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0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2조는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라고 ‘보육’을 정의한다.

일부 시기 동안 교육과 보육의 경쟁구조가 있었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간에 서로 다른 필요와 이데올로기에 기초함으로써 인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통합의 과정에서 교육과 보육을 협의로 보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관점을 잘 정립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다. 보호·양육의 관점에서 돌봄은 유아교육과 보육에서 매우 중요한 전문성의 한 요소이다(오채선, 2011). 1997년 교육부로 통합된 스웨덴의 경우, 교육이라는 용어를 보호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재정의하며, 교육과 보호를 포함한 영유아의 초기 경험의 중요성, 영유아 발달과 가족 복지를 강조한다(Dahlberg & Moss, 2005).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교육선진국 중심으로 지속 제기되어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윤홍식, 2012), 본질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교육과 보육을 기계적으로 분리하려는 것은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

2주제 발제문과 같이 유아교육과 보육의 가치와 정체성을 재확립하며, 질 높은 교육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재차 공감을 표한다. 영유아학교는 더욱 체계적이고 질 높은 돌봄기본교육을 공적 서비스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 0-5세 영유아학교 체제 구축: 영유아기의 고유한 삶이 펼쳐질 수 있는 학교체제

현재 추진 중인 통합 절차에 따라 법령이 정비된 후에는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 기관은 (가칭)유보통합기관으로 일원화된다. 유아의 본질인 놀이를 자연스럽게 추구하면서도 공적인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0-5세 영유아학교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학교’라는 용어로 인해 우려를 표하는 시선이 많다. 통합으로 인하여 협의의 교육을 쫓아가게 되리라는 우려는 ‘학교’라는 용어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고 보인다. ‘학교’하고 할 때 고정된 교육과정, 학습을 위한 공간, 다양성과 개별성보다는 획일성이 우선되는 분위기 등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통합기관은 새로운 모델을 강조한다고 보여지나, 이보다는 ‘학교’라는 용어에 덧 대인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여 영유아기 학교가 추구하는 원형이 바르게 구현되는 모델이어야 한다고 본 토론자는 생각한다.

학교란 단순한 물적 장소가 아니라 삶을 함께 펼쳐가며 구성원 모두가 성장해가는 곳이다. 영유아를 위한 학교는 유아교육과정의 뿌리인 놀이 중심, 생활 중심의 교육과정이 펼쳐지는 학교일 것이다. 유아교육의 본질은 놀이이다. 영유아기의 놀이는 학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놀이 그 자체가 삶이며 목적이기 때문이다(Huizinga, 1989). 새로운 형태의 통합기관은 영유아의 삶에 적합한 성장을 지원하는 유아교육의 본질에 맞는 방향으로 설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통합기관은 명실공히 ‘0-5세 영유아학교’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3)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영유아학교

새로운 0-5세 영유아학교는 학교화(schoolification)가 아닌 영유아기 고유성이 추구된, 새롭고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학교는 영유아기에 적기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조부경 등, 2019). 새로운 유보통합기간이 모두 유치원이 되는 것인가, 모두 어린이집이 되는 것인가, 또는 제3의 정체불명의 기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불식되지 않는 주요한 이유는 개별유아와 가정의 요구가 매우 다양한데 통합으로 인해 이러한 다양성과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유아의 본질인 놀이가 요구,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구성되며, 영유아가 공간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며, 유아와 가정의 개별적인 요구에 세심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유아학교로서 열린 공교육 체제를 구축해가야 할 것이다.

0-5세 영유아학교는 유아가 경험하는 최초의 교육환경으로서, 영유아 개인의 성장과 발달, 행복을 추구하는 교육·돌봄 문화가 형성된 장소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김익균 교수님 발제에서 함께 알아본 바 있듯, 법에서 정의한 어린이집의 종류만 7가지인 현재 상황에서, 그 공간을 구성하는 시설과 설비의 기준을 적절하게 통합해가는 과정이 잘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유치원 공교육이 초등학교의 병설의 형태로 굳어져 왔다는 점에서도,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를 위한 단설 형태의 영유아 전문 시설로서 기관이 필요하다.

4) 영유아교사 전문성의 균질성 보장 및 처우 개선

영유아 어디서든 동등하게 교육·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돌봄을 실천하는 영유아교사 전문성의 균질성을 보장해야 한다.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그 어느 때보다도 주변 성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영유아교사의 전문성은 교육과 보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되는 통합절차에 따라 2025년부터는 개편된 자격과 양성 과정이 적용된다. 4년제 학과중심으로 양성되는 초·중등교사와 달리 이미 학점제, 2~3년제, 4년제 등 다양한 학력과 경로로 운영되는 현재 영유아교사 양성체제에서는 전문성의 균질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한편 전문성을 가진 돌봄은 모성적 사유를 수반하며 교사의 실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포함된다(정선아, 2015)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유아교육·보육 관련 교원의 처우 개선이 반드시 우선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근로시간, 소득, 인사, 사회적 대우 등에서 보다 열악한 기관 교사의 자격과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경계해야 할 것이다.

3. 유보통합의 우선 추진과제: 행정과 재정의 지속 가능한 통합

행정편의나 예산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전제는 중요함과 동시에 행정 및 재정 통합은 추진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통합의 과정에서는 각 기관의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는 행정과 재정은 실질적인 정책 실현의 틀인데, 이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성숙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 기관 간 차이를 존중하며 본질적 고민과 실천은 한쪽에서 지속하면서, 한쪽에서는 세부적인 과제에 대해 깊이 안을 만들어야 가야 한다. 이에 본 토론자는 부처를 시급히 통합하고, 세부과제들은 충분한 세부적, 체계적 협의를 점진적으로 만들어갈 것을 제안한다.

1) 부처 통합은 조속히, 세부과제는 충분한 세부적·체계적·점진적 협의를 통해

분리되고 이원화된 소관 부처로 인한 모순과 비효율은 이미 오랜 기간 지적되어왔다. 부처 통합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안정적인 행·재정 전달 체제와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하여 현 이원화된 부처를 통합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다. 특히 전 생애의 기초교육과 총체적 발달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적 접근을 일관성·연속성 및 연계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위원회에서 교육부로 부처 통합을하기로 결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이에 연내 정부조직법을 통과하여 유보통합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부처를 통합했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지속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2년 현재 국·공·사립 유치원 원아는 552,812명(교육통계서비스, 2022), 보육기관 원아는 1,095,450명(보육통계, 2023)으로, 이는 초등학교 학생 2,664,278명, 중·고등학교 학생 2,610,776명과 비교할 때 각각 61.9%, 63.1%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단순히 0-5세와 6-17세를 비교해도 초·중등학생 대비 영유아 비율은 31.2%에 다다른다. 그러나 초·중등교육을 지원하는 교육부 조직은 1실 3관 8과인데 비해 유아교육 지원 조직은 여전히 1과에 불과하며, 보건복지부는 현재 1관 3과의 보육 관련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 통합 이후에는 최소한 1실 2관 4과 이상의 영유아교육 행정체제를 보장해야 할 것이며, 이에 안정적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하여 현재 2개 시·도 교육청에서만 조직하고 있는 유아교육 전담부서 역시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육부로의 통합으로 인해 보육과 복지 지원의 누락으로 이어져서는 상호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어렵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기 구축된 보육서비스 지원체제를 교육부 및 교육청과 누락 없이 밀접하게 연계함으로써 안정적인 유보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성과지향의 무리한 통합이 아닌, 이해당사자 간에 세부적이고 충분한 협의 과정을 통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국가단위 및 지방단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 정립해가도록 해야 한다.

2)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합 재원 마련

생애초기 출발선의 평등이라는 본질적인 관점에서 미루어 볼 때, 통합 후 영유아학교 체제를 기반으로, 현재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무상교육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시설유형에 따라 여전히 수요자 부담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균등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학부모의 만족도가 저해되고 있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등 교육선진국에서는 ECEC에 무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OECD, 2015)는 점에서 통합 후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현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누리과정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그 지원이 충분하지도 않고, 준거도 불분명하여 기관 간 지원규모가 다른 등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영유아의 연령, 이용 시간, 부모 수입 등 무상교육·보육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영유아가 균등하게 유보통합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통합 초기에는 교사 자격의 일원화, 처우 개선, 지원 격차 해소 등 재정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특별회계법에 의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시 통합한 재정 지원 정책의 대안이 마땅하지 않을뿐더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고영미 등, 2022).

따라서 현재 국비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통합 이후에도 지속 사용하되, 유보통합교부금 신설 등 유보통합특별회계를 통한 통합 초기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송기창, 2017).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되는 유아교육·보육 관련 특별교부금 및 특수보육시책사업비가 통합 과정에서 누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보통합 시 초·중등교육 재정에 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 안에서 영유아교육의 독립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다만 보육재정이 현 구조 속에서 교부금만으로 유보통합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현실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합 재원 모델을 구축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 발제자는 이원화된 기관 간 상이한 입장 차에서 발생하는 쟁점과 한계점으로부터 이해당사자의 설득과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기초발제문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감함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두 주체가 오랜 기간 다른 체제 속에서 각기 추구해온 고유성이 있기에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다. 그러나 모두가 ‘영유아 입장에서’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를 갖는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영유아기의 고유성이 존중받는 0-5세 영유아학교 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에 다함께 동참할 것을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고영미, 임수진, 박수경, 서윤희, 이소현 (2022). 영유아학교체제 기반 유보통합 정책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이슈페이퍼**(2022.9.).
- 교육통계서비스 (2022).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2.6.20. 인출.
- 김형수, 박재승 (2015).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건축계획요소 및 공간위계에 관한 연구: 경기도 화성지역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22(4), 3-14.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육통계 (2023).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에서 2022.6.20. 인출.
- 송기창 (2017). 누리과정 재정지원체계에 비추어 본 유보통합 재정지원체계의 설계 방향. **교육재정경제연구**, 26(1), 27-44.
- 송치숙 (2021). 세계 주요국의 유보통합 동향 및 시사점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19(1), 111-143.
- 오채선 (2011). 유아교육·보육 정책 변화에 따른 유아교사 전문성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5(5), 249-277.
- 윤홍식(2012). 가족주의와 가족정책 재유형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 **한국사회복지학**, 64(4), 261-284.
- 이정옥, 류승희, 임수진 (2018). 정권별 유보통합 관련 사회적 담론의 의미구조 분석: 1982년에서 2016년 사이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8(2), 469-500.
- 임수진, 류승희, 이정옥 (2017). 언어 네트워크 분석에 기초한 유보통합의 의미구조 탐색: 1991년-2017년 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어린이미디어연구**, 16(4), 181-209.
- 장영인 (2014). 유보통합 논의에 대한 재검토: 교육중심의 통합에 대한 보육관점의 논의. **한국영유아보육학**, 7(1), 113-142.
- 정선아(2015). 보육의 전문성과 보육교직원의 양성체계. **한국보육학회학술대회자료집**. 13-31.
- 조부경 (2022.8.22.). 유보통합의 본질과 지향점. **국정과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39-60.
- 조부경, 김경은 (2017). 교육·보육과정으로서 누리과정의 성과와 내실화 방안. **한국유아교육연구**, 19(3), 1-22.
- 조부경, 김미애, 서윤희, 김호, 오재길, 이승준, 최현정 (2019). **미래형 유아교육 정책 비전과 방향 수립**.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정책연구과제. 의정부: 경기도교육청.
- 조부경, 박재윤, 임승렬, 정선아, 우명숙 (2012). **유아교육 보육 통합 법제화 방안 연구**. 2012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과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2023). <https://eduinfo.go.kr/>에서 2023.6.20. 인출.
- 최은영 (2015). 한국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선결과제. **육아정책연구**, 9(1),

257-277.

- Burchinal, M. (2018). Measuring early care and education quality.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1), 3-9.
- Dahlberg, G., & Moss, P. (2005). *Ethics and politic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London: Routledge Falmer.
- Huizinga, J. (1989). *호모루덴스[Homo ludens]*. 김윤수 역. 서울: 까치. (원전은 1938년 출간)
- Kaga, Y., Bannett, J. & Moss, P. (2010). *Caring and learning together: A cross-national study of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within education*. Paris: UNESCO.
- Moss, P. (2015). A fully integrated system of early childhood and care: A long but worthwhile journey. *한-OECD 유아교육.보육 정책 국제세미나 자료집*. 72-93.
- OECD (2015). *Starting strong IV: Monitor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OECD.

토론 4

김동훈 팀장(육아정책연구소 보육정책 연구팀)

토론문

김동훈(육아정책연구소)

그간 정부차원에서 유보통합의 시기, 단계, 커다란 방향성이 발표되었고, 그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련 단체, 각종 학술대회, 포럼/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유보통합 방향성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제는 유보통합의 구체적 정책방안 마련과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해야 하며 보육제도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활성화될 시점이다. 발표자들께서 제시한 기관통합의 방향, 쟁점과 과제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바이며, 보육의 입장에서 유보통합의 방향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몇 가지 고민거리를 드리고자 한다.

1. 유아교육과 보육 구조의 같음과 다름에 대한 이해 필요

- 유보통합에서 무엇보다 영유아의 관점에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현 이원화 구조하에서 보육과 유아교육간 구조적 차이가 무엇인지, 유보통합의 현실적인 쟁점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공유하는 것 필요
-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 등의 업무체계 이해

2. 보육계에서는 유보통합으로 얻는 득실과 수용성 논의 필요

- 수요자인 부모들은 유보통합으로 비용부담 경감, 서비스 질과 이용편의성 증대 등을 기대
- 공급자 측면에서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없애는 것을 고려, 최종 수요자인 부모들은 어디를 가든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임
- 교육부로의 통합은 상당부분 교육시스템을 기반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유보통합에 따라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의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어린이집 원장(운영자)은 어린이집 유형, 운영기준, 회계기준, 비용지원구조가 유치원과 다른 상황에서 유보통합 모델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 교수 등 보육전문가는 교사자격, 양성, 연수 유보통합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 고민 필요
- 유보통합은 재정당국, 관할부처, 지자체,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와 부모 모두의 수용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

3. 유보통합 추진시 보육계의 입장을 구체화할 필요

- 비용구조: 표준보육비용과 표준유아교육비, 보육료 수준, 부모자부담
- 운영기준: 시설(보육실 등) 면적, 놀이터 설치, 교사자격(원장, 보육교사, 기타), 교사대 아동수, 운영시간
- 관리감독, 회계규칙
- 가정 vs 이외 어린이집 입장

4. 유보통합은 영유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행정과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함.

-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의 이상적 모습을 그리는 것은 중요하나, 현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됨
- 국공립과 민간의 영역이 분리

- 유보통합은 경쟁이 아닌 협력과 연계가 더욱 중요할 것임
 - 단기와 장기 추진의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
5. 유보통합의 선결 과제는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정임.
- 유보통합에서 관리체계 일원화를 체계적으로 추진, 실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에서, 보육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와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별 특수시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6. 영유아수가 감소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엄밀한 유보통합 재정추계와 효과성 분석 필요
7.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라면 동질의 보육, 교육,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지역이나 영유아 환경에 따른 차별이나 차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부모들의 기관 이용 비용을 경감해 준다 등의 기대를 할 것이며, 동시에 모두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더욱 더 기대할 것임을 인지할 필요

토론 5

- '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기조발제에 대한 토론 -

이원선 본부장(한국보육진흥원 정책기획본부)

‘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기초발제에 대한 토론

이 원 선

한국보육진흥원 정책기획본부장

30여 년이 지나도록 실현되기 어려웠던 유보통합은 2022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되었으며, 교육부·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영유아의 동일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구현을 목표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추진부서를 교육부로 확정하고, 격차해소 및 통합기반 마련을 위해 세부 과제와 순차적 추진 일정을 발표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아이행복연구자문단을 발족함으로써 지난 그 어느 때보다 통합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앞선 두 분의 주제 발표에 의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역사와 법적 근거, 대상, 기관의 성격, 설립 및 운영 기준, 재정, 관리부처 등 많은 사안에서 차이가 큰 만큼 통합방안의 세부과제들을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에 적극 공감하며, 통합 과정에서의 모든 논의가 영유아 권리의 최우선 보장을 전제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현재 추진단에서 과제별 추진방안 연구가 진행 중이므로, 본 토론은 세부적인 사안을 논의하기보다 이러한 영유아 중심,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기반하여 주제 발표에서 제시한 핵심 쟁점 및 과제에 고민을 더하는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영유아기 아동의 돌봄과 교육에 대한 국가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영유아기는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생애 초기인 영유아기의 발달은 특정한 인지적 관점이나 어느 특정한 연령에 한정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출생한 시점부터 신체, 정서, 사회, 인지, 언어 등 전인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며, 이후 모든 단계의 성장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유아기의 중요성, 영유아기 발달의 연속성은 우리가 어떻게 통합의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는 이제까지 보육현장에서 돌봄과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돌봄과 교육이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보육현장은 그동안 많은 양적 성장과 질적 성과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자칫 통합 과정에서 우려되는 돌봄과 교육의 분리는 영유아의 삶조차도 이분법적으로 구분시킬 가능성이 있다. 교육 또는 돌봄, 부모 또는 기관, 정규 또는 비정규 등의 방식으로 사안을 모두 이분화하여 삶을 구분하는 관점은 영유아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제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구분하여 규정했던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나갈 것인가에 관한 철학적 담론을 통해 가치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보통합이 단순히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구조적인 결합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둘째, 교사 양성 및 자격체계 또한 유아교육이나 보육이나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사 양성 및 자격체계 통합에 대한 사안은 보육교사의 교직 이수와 유치원 교사의 영아보육 전문성 확충에 대한 논의, 영아기 돌봄 역할에 대한 상이한 인식 등 갈등의 소지가 가장 높은 과제이다. 최근 사회는 기후와 환경,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인간 존재에 대한 관점이나 지향하는 인간상, 영유아 중심, 자율성과 존중에 대한 가치 등이 달라지고 있다. 분명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예전과 달라지고 있고,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의 스펙트럼 또한 다양하고 넓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 영국, 핀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유아교사와 보육교사들에게 필요한 핵심역량 등을 재정의하거나, 영역을 다시 구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필요한 경우 자격 기준을 상향화하는 나라도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도 교사의 역량을 다시 재정의할 필요는 없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단순히 교과목 중심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는 방식이 가장 최선의 해결 방법인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통합 과정에서 기존 교사에 대한 자격뿐만 아니라 양성 체계, 처우, 전환 방식, 경과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의 시각이 눈앞에 닥친 현상과 당면과제 해결에만 급급하지 않고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교사의 역량이 무엇인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다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보통합 정책의 대상은 영유아와 그를 둘러싼 인프라 전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법, 전달체계, 기준, 기관, 교사, 재정, 비용, 시스템 등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매우 오래전부터 다르게 출발했거나 다른 방식으로 기능해왔기 때문에 논의되어야 할 사안은 다양하다. 다만, 법이나 기준, 기관 등 그 다른 여러 가지 요소와는 다르게 영유아는 어느 기관에 다니든, 어느 곳에 살든,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든 그 존재의 의미와 무게가 다르지 않다.

한 아이를 잘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곧잘 인용되는 것처럼 이제 교육부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를 수립할 때, 정책의 대상을 영유아와 그 주변의 인프라 전체를 염두에 두고 설계하기를 바란다. 단순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물리적, 기능적, 제도적으로 통합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영유아와 부모를 비롯한 주변 가족, 교직원, 지역 사회 등 모두가 함께 영유아를 키우는 체계로써 원활하게 기능하는 것이 진정한 통합의 성과가 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영유아를 키우는 일에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진정 통합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진정한 영유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서는 예산, 제도, 서비스 측면에서 지역별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지역 간 격차로 인해 영유아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중앙 차원의 관리 방안과 중앙과 지역 간 협력 방안이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

2023년도 2분기 기준 0.75명으로 떨어진 합계 출산율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영유아 인구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은 단순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같은 기관으로 만드는 일은 아닐 것이다. 통합과정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철학과 가치를 재정립하고, 제도, 재정, 서비스, 인력 등의 다양한 제반 인프라를 재정비하여 가정, 기관,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아이를 키우는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의 구현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 찾기 와도 맞닿아 있을 것이다.

스웨덴의 유보통합은 1970년대 일하는 부모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시작되었지만, 추진과정에서 UN 아동권리협약 비준, 평생교육의 중요성 인식, 교육의 재개념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교육적 관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 부모가 직접 키우는 생후 1년을 제외한 1세부터 16세까지의 유아, 아동,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모든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아동의 관점,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다. 각 나라의 유보통합은 그 사회적 배경과 시대적 요구 등에 의해 상이하므로, 어느 특정한 나라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다만 여러 나라의 다양한 사례를 유연하게 검토하여 이번 통합이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영유아의 권익과 수요자의 편의성이 보장되는 정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교육부·보건복지부(2023).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유보통합 추진 방안. 2023.1.30. 보도자료.
- 정선아(2007). 스웨덴의 유아교육·보육 통합 정책(유아의 권리와 삶의 관점에서). 유아교육 연구 제27권 제6호, 101-124.
- 한국영유아보육학회(2023). 지속가능한 교육복지 관점의 한국형유보통합모델 구축방안.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Gobeyn, H., Haug, P., Kagan, S. L., Lazzari, A., De Stercke, N., & Vandebroek, M. (2013). 유아교육과 의무교육 관계를 재개념화하기. 정선아, 윤은주, 이진희 역(2017) 서울: 창지사

토론 6

- 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
전영주 원장(동화나라 어린이집)

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전영주 원장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부위원장

제7차 유보통합정책포럼 쟁점 토론회를 “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정책토론회”로 개최할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신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하게 되어 월요일 아침부터 함께 해주신 많은 원장님들과 모든 참석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쟁점 토론회를 통해 성공적 유보통합을 위한 통합모델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 “아이들이 누리는 평등한 첫걸음”이 제대로 내딛어 질수 있는 통합이 이루어질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통합으로 인한 양질의 유·보육서비스 보장 요구

교육부가 영유아들의 발달 격차를 해소하고 부모들의 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해 2025년부터 시행한다는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의 입장에서 발달, 교육,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영유아가 있어야 하며 모든 영유아에게 공정한 출발선 보장 및 양질의 유·보 서비스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1) 다양한 유형간의 통합모델

유아교육과 보육은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체계에 속해 있으며 출발점과 목표, 지향점을 달리하여 목적과 기능, 관할 행정부서가 서로 다른 이원화 체제로 발달해 왔기에 여러 방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념이나 체제 교육대상 교육과정 운영형태 수업일수 학급인원 교사양성 평가체제 평가지표 지원시설등의 차이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영유아의 평등한 교육의 출발점이 될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인건비지원 어린이집과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간,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의 통합이 유보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준비되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발제원고에 공감합니다.

2) 교사자격통합 및 전문성 향상에 따른 급여체계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제도는 근거법이 다르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자격구분과 자격부여 방식, 이수과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유치원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에 비해 1.8배정도 많이 배치되어 있고 어린이집은 1급 정교사가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소속 기관이 다르기에 교사를 지원할 때 필요한 자격증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유치원교사 자격과 보육교사 자격이 상하인식으로 왜곡되기도 합니다

어린이집은 근로자인 보육교사, 유치원은 교원인 유아교사, 어린이집원장은 보육교직원, 유치원원장은 교원으로 나뉘므로 인해 계층화가 형성되고 있기에 새로운 통합기관에 합당한 영유아교사자격과 교사양성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는 1962년 「유치원설치기준령」이 제정·공포됐고, 1961년 「아동복지법」에 탁아시설을 규정하게 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법적인 이원화가 시작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는 노무를 제공하고 댓가를 지급 받는 것은 모두 동일하지만, 그 노동의 성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지만, 유치원 교사는 국공립의 경우 공무원이며, 사립의 경우는 사립학교 교원입니다. 더불어 4대보험과 퇴직금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서 4대 보험과 퇴직금(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공무원 연금과 건강보험을, 사립 유치원 교사는 사학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자격등급, 근무연속, 담당보직등과 연동한 합리적인 통합 급여 지급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지자체 특수보육시책 처우개선비 등 지원기준 등을 통일하여 지역격차나 유아반 영아반에 대한 대상격차도 없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보육료는 연령별로 동일한 금액이지만,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지원 되는 부분은 지자체별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고, 경력이나 자격 등급에 따른 대우나 업무 구분이 없다는 문제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보통합으로 인해 교사자격 통합 이후 불안정한 교사들의 고용안정은 보장할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합니다

3) 재정통합

저출생과 부모급여도입 등으로 인한 원아모집의 문제로 운영이 어렵거나 폐원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들은 운영자나 교사 학부모까지도 모두 불안합니다.

문달는 어린이집이 5년새 20%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 유보통합으로 인해 유치원보다

는 어린이집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많은 관계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교사 인건비 외에 기관유지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수반됨으로써 운영자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할수 있도록 운영 여건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사 겸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겸직없이 기관의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또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이 내는 교육세 (지방재정교부금)는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유아에게 공정하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유보통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1.5배가량 많게 나타난 것은 초저출생 상황에서 낳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소망과 국가 지원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는 어느 대학 교수님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기관에 예산지원을 통해 모든 영유아들이 교육과 보육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수 있다면 청년층 인구 유입이나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산 조달 계획은 정책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조달계획과 확보방안을 모색하고 예산확보가 선행되길 바랍니다

■ 유보통합 핵심 쟁점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안)을 보면 핵심과제중

1.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

- [1-1] 유.보통합 및 3~5세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 [1-2] 유아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모델 다양화
- [1-3] 유아교육기관 교육여건 개선
- [1-4] 디지털 치유 및 안전한 디지털 경험 지원
- [1-5] 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 확대

2.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0세부터 5세까지 발달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추진방향 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영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갈것인지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추진방안의 기본계획에도 영아에 대한 언급이 없어 현장에서는 우려와 함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아기에는 영아기의 특징이 있고 어느 때보다도 신체·정서의 돌봄과 성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1:3 1:5 1:7 이라는 교사대 아동 비율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어린이집에서는 영아보육을 감당해왔습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이론 공부를 통해 얻어지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얻어지는 실천 지식이 필요하기에 두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을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어린이집은 영아전문가입니다.

0~5세, 3~5세, 0~2세로 유형을 다양화하여 지역적 특징 및 기관의 인적, 물적여건, 선호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각 연령에 맞는 전문인력이 필요한만큼 영아기의 돌봄을 안해본 교사보다는 영아보육에 적합하고 경험이 많은 곳에서 운영할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상연령이 0~2세, 3~5세에 대한 원별 반구성은 기관의 규모에 따라 일정 부분의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구성되어 영아반 쏠림 현상으로 인한 무리한 경쟁문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보통합의 핵심 쟁점 중 재정지원 계획에도 영아는 제외된 상태라는 것을 발제원고에서도 볼수 있는데 영아에 대한 비전과 로드맵 제시가 필요합니다.

■ 제언

출생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유아 보육 전문성을 지켜왔던 어린이집의 필요와 효율성, 중요성은 너무나도 큽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집과의 근접성이 43.9%, 보육의 질이 31.5%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유아 부모의 이용 요구가 높은 지역적 특징 및 기관의 인적, 물적 여건, 부모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인해 소규모 시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규모별 모델 방안이 마련되어 교육과 돌봄을 동일선상에 놓고 0~2세와 3~5세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여, 현실적인 통합이 가능한 한국형 통합 모델이 제시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유아의 행복과 권리 보장 중심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양육자의 요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부모의 기관 이용이 용이하게 되어 부모선택권이 보장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토론 7

이지희 보육교사(후암 어린이집)

토론문

교사 이지희

유보통합에 대한 중차대한 자리에 교사로서 의견을 토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교사 대표로 드리는 말씀이라는 생각에 무거운 책임이 함께 공존합니다.

【보육의 입장에서 보는】 유보통합에 대한 교수님들의 발제안에 대해 교사 입장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유보통합의 일정을 정해놓고 긴박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볼 때 이번에는 유보통합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보다는 불안감과 염려의 마음이 더 앞서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보통합이 2025년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통합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유보통합은 추진과정에서 투명한 정보 공유, 심도있는 현장의견 수렴 등이 이루어질 때 유보통합의 장점을 보다 살리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정효정 교수님의 발제문을 통해 유보통합에 대한 로드맵을 알 수 있어 보육교사로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9년, 어린이집에서 11년째 근무 중인 보육교사입니다. 보육 현장은 7시간(9시~16시), 유치원교사는 4~5시간(9시~13시 또는 14시)아동을 법정 정규로 담당하고 있으나 유보통합이 되면 보육시간의 단축으로 교사에게는 충분한 보육과정 준비시간 및 행정업무 시간 확보가 기대됩니다.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제 3의 이름으로든 직장인으로서의 급여와 복지가 보장되고 영유아들은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제대로 된 유보통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영유아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전문적 돌봄'이 보육(보호와 교육)이라는 이름의 교육복지적 관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전적 동의하며 유보통합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현장의견 수렴 및 대립 안에 대한 논의와 해결점을 찾아가는 공론화가 지금부터라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보통합 이후 발급될 자격증은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유치원교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유보통합 시 아동연령이 통합될 것이고, 아동연령은 0~5세 대상인데 모든 교사는 국가가 인정한 유치원,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므로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면 유치원교사는 0~2세의 영유아 교육·보육관련 과목을 추가 이수하고, 보육교사는 교직과목이 추가 이수될 수 있을 것이나

현재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동일한 누리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치원, 보육교사 자격증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시가 의무화되어 있어 어린이집 평가제 결과 여부 등 상세한 정보공유로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비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보공시가 어린이집의 투명성,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회계, 운영관리, 복지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은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전문성에 대해 거론되고 있는 3급 보육교사는 전국 보육교사의 1.14%(2022. 보육통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현재도 개별능력과 선택에 따라 담임, 보조교사 등 업무를 나누어 분담하고 있으며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유보통합 과정에서 논의될 자격통합은 이미 발급된 자격증과 유보통합 이후 발급될 자격증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 통합 및 교사 자격제도 추진 등 풀어야 할 현안 과제가 많을 것이나 무조건적인 한 지붕 두 가족 체제가 아닌 통합과 수용의 과정이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해결점을 찾아 진행되어가야 한다고 보며 이만 토론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8

임경아 학부모(봄샘푸르시오 어린이집)

안녕하십니까? ”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학부모 입장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신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 정부의 저출산 대책 5대 과제 중 하나인 유보통합을 앞두고 두 아이의 어머니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워킹맘으로 유보통합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및 앞으로 발전해 나아갈 중장기계획에 많은 관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유보통합 정책을 들여다보니 중장기계획에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 및 공립 유치원과 상생하며 이끌어가는 정책보다 공보육 공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에 학부모로서 우려되는 점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첫째 아이를 낳은 후, 처음으로 어린이집이라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존재함에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생긴 후, 부모가 맞벌이를 한다는 것은 막연히 생각했던 희생보다 더 많은 희생과 시간적 빈곤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서의 어린이집이란 단순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닌 저희에게는 생계와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너무나 크고 절대 흔들리면 안되는 필요불가결한 존재입니다.

다행히 첫째 아이를 보내기로 결정했던 민간어린이집에서 부부의 빈 손길을 채워주셨고 저희 부부는 매우 만족스럽게 아이를 보낼 수 있었지만 이렇게 고마웠던 민간어린이집은 저출산으로 인하여 폐원을 하게 되었고, 만족도 최상이었던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이원해도 즐겁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잘 할 줄 알았던 아이는 익숙한 이전 어린이집이 떠나 새로운 환경, 사람들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였고 적응이 필요한 시간 동안 저희 가정은 불안해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마다 기질, 성향, 발달사항에 따라 가정과 같은 환경의 가정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수요자도 있고, 구립보다 다양한 특별활동이나 외부활동의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하고자 하는 수요자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유치원을 다니다 적응이 어려워, 어린이집으로 다시 입학하는 사례도 종종 엿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내 아이에게는 제2의 집이기에 영유아대상 기관을 선택할 때, 내 아이가 안정감 있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기준이 기관 선정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 아이를 잘 이해해 주는 선생님을 만나 이원하는 일 없이 기관을 다니는 것이 보다 더 안정적인 유아기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아이의 첫 어린이집 생활을 경험하며 아이를 꼭 구립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이유를 더욱 찾기 힘들었고 둘째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6개월때부터 집에서 가깝고, 안정적으로 돌봄을 해줄 수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선택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둘째 아이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데, 저희 둘째는 매우 까다롭고 예민한 기질의 아이입니다. 환경 적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학교나 유치원처럼 커다란 공간에서 주는 두려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등원을 유독 힘들어 했던 날은 원장선생님께서 회사에서 힘들어 할 저를 위해 아이의 사진과 함께 걱정말라며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해 주시며 부모의 마음까지 토닥여 주셨습니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유치원 원장님보다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학부모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는 빈도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제 아이를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집 근처 유치원, 차량이 되는 유치원, 집 근처 구립 어린이집에도 문의하고 알아보았지만 ‘6시 전에 남아있는 친구가 없습니다.’, ‘혼자 있어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라며 늦은 시각까지 아이를 맡기기에 눈치가 보이는 기관이 많더군요. 그 때 한 줄기 빛처럼 민간어린이집 원장선생님께서 ‘회사 편히 다니세요.’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민간 어린이집 덕분에 ‘아이 엄마도 회사다니며 아이 키울 수 있구나~’를 느끼며 처음으로 국가가 내 아이도 함께 키워주고 있구나를 경험했습니다.

현재 봄샘푸르지오어린이집의 원장님과 선생님의 사랑을 아이도 느끼는지 어린이집과 가정에서의 모습

이 일치합니다. 28개월의 아이가 가정 밖에서도 긍정적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매일 즐거움과 안정감을 선사해 주시는 봄샘 푸르시오 어린이집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제 주변에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은 항상 말합니다. ‘오늘 00이 누가 봐줘?’ ‘00이 유치원 방학 때 어떻게 하지?’라며 오로지 기관에 아이를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육과 보육의 경계선이 분명히 있고, 그 경계선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잘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유보통합 정책을 들여다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과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과 협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중장기계획을 본다면 국가에서 모든 교육과 보육을 도맡아 아이들을 키워준다는 말 속에 현재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미래도 가정어린이집의 미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교육이란 공교육과 사립의 적절한 안배를 통하여 수요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공되고, 긍정적인 경쟁을 통하여 보다 질 높고 다양한 교육과 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국가책임의 공교육으로 전환된다면 어느 누가 연구하고 어느 누가 더 나은 교육과 보육을 위하여 힘 쓰겠습니까? 균형, 조화로움, 상생, 협치라는 단어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유보통합 계획에서는 균형, 조화로움, 상생, 협치가 보이지 않아 학부모로서 느끼는 유보통합 정책의 기초는 매우 불안합니다.

유보통합에 대한 정책 방향에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영유아기를 보낼 수 있는 방안보다 부처의 일원화와 재원조달의 떠넘기기, 유치원 위주의 통합 발언 정도로만 찾아볼 수 있어 어린이집이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가 될 정도입니다.

유보통합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운영난이 없는 기관을 만들어 영아도 유아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교육부의 재정 지원 덕분에 더 나은 환경을 제공받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부처만 교육부의 일원으로 서로 떠넘기는 식의 재정 지원 정책으로 불안함을 야기시킨다면 유보통합의 시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으로 가기 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에게 어린이집의 존폐위기를 걱정 해야하는 희생을 강요당하는 시기가 될까 불안합니다.

초저출산의 여파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폐원이 앞으로도 지속 될 것이라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심장이 쿵 떨어집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운영난으로 인한 줄폐업이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어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첫째 때 경험했던 폐원으로 인한 어린이집 이월을 둘째에게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불안해지면 저희 가정은 크게 흔들릴 것이고 엄마의 자리에 있는 저 또한 직장을 그만두는 선택을 강요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폐원으로 인해 아이를 맡길 수 없어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에게 유치원 위주의 정책실행으로 기관의 선택권을 앗아가지 말아주세요. 내 아이를 어린이집과 같이 양육함에 있어 부모에게 우리집에서 가깝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 내 아이의 영유아시기가 안정적인 발달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우선 될 수 있는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영유아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영유아기를 보낼 수 있는가! 입니다. 학부모가 진정으로 원하는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 교육정책은 무엇인지 궁극적인 목적과 실질적인 수요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정책을 펼쳐주시면 국가가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앞으로 영유아의 최우선 이익은 무엇일지 전문가, 운영자, 선생님, 학부모와 함께 많은 토론을 통해 정책의 방향이 올바르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많은 학부모님을 대신하여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이 폐원하지 않고 국가에서 동일하게 지원하여 내 아이의 성향에 맞는 학부모의 선호도에 맞는 유형의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원아도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민입니다. 이 아이들이 유보통합이라는 저출산 정책으로 인해 조금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 상생하는 유보통합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봄샘푸르지오 원장님과 선생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토론 9

유보영 과장(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memo

memo

memo

memo

토론 10

지혜진 과장(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

memo

memo

memo

memo

영유아의 안전한 성장과 보육교직원의 행복 동반자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사업



보육교직원 대상 온라인 안전교육
(기본, 심화, 영아담당교사, 유아담당교사) 실시



어린이 안전지킴이 그림책 출간(6종)
• 재난안전, 보건위생, 교통안전



영유아 이동안전교육 수행 및 온라인
안전체험 프로그램 적용



영유아, 보육교직원, 보호자 대상 안전
예방관련 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보급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보육교직원 대상 복리후생 사업 실시



영유아 안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및 전국민 대상 공모전 실시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카카오톡 채널 운영 | https://pf.kakao.com/_BxDLxck

'23년도 공제상품 정기 가입안내

공제 상품(어린이집 대상) 총 17종

기존 상품 : 16종

신규·변경 상품('23년)

영유아 관련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돌연사중후군 특약/ 시간제보육 특약
제3자 등	제3자 치료비 특약/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특약 (대위권포기 특약)
배상책임 관련	가스사고 배상책임/놀이시설 배상책임/ 승강기사고 배상책임, 화재배상책임 특약
재물(시설) 관련	화재(건물/집기)/풍수해 특약/ 재난사고 위로금 특약(화재/풍수해)
보육교직원 관련	보육교직원 상해/ 보육교직원 진단비·위로금 특약
보증 관련	(이행)보증/신원보증

- 신규** 영유아 관련 : 형사방어비용 특약
 - 업무상 과실로 보육교직원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형사방어비용(변호사선임비)을 보상
- 변경** 화재(건물)
 - 기본형 어린이집 정원별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 설정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 = 어린이집 정원 x 680만원
 - 옵션형 공제료 추가납부를 통한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 증액



※ 육아종합지원센터 상품(9종) 별도 운영

☎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및 대표전화(1600-06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직원이 선택한 에듀케어아카데미
영아, 장애아, 방과후보육과정(매월 1일개강)



보육교직원 법정필수의무교육, 안전교육
한번에 해결!



현장적용력을 높이는 사례중심 콘텐츠
다양한 현장Tip 영상 제공



SMART 부모교육
영상 및 가정통신문 무료제공



학습자 친화형 강의화면 구성
웹/모바일 어디서나 편리한 학습



부모 마음을 사로잡는
상담 노하우 & 부모상담 체크리스트 제공

에듀케어아카데미를 검색하세요!



문의 1833-4114 | info@educareac.com
www.educareac.com

굿티처

듣고 싶은 강의! 소문내고 싶은 강의!
소장하고 싶은 강의!



한번에 해결!
법정필수교육



책 속의 지식이 내 것으로
복러닝



바로 활용하는 효율 200%
10분 클래스



보육교사 필독도서
굿티처 BOOK

교직원 전문성강화 주요과정

영아 놀이따라 관찰하고
기록하고 지원하고



교사의 변화를 이끄는
교사 성장 맵



특별하는
부모 상담 레시피



직업에서 마음만큼 두드러지는
교사 상호작용 매뉴얼



이미지페이지

유아교육 도안 및 폰트 무제한 제공 사이트

이미지페이지의 특별한 점을 알아보아요?

POINT1

무제한 다운로드

POINT2

종이와 프린터만
있으면 OK!

POINT3

개수 제한 NO
다양한 놀이를 한번에!

POINT4

놀이 / 역할중심
(누리 교육과정)

놀이



놀이 · 행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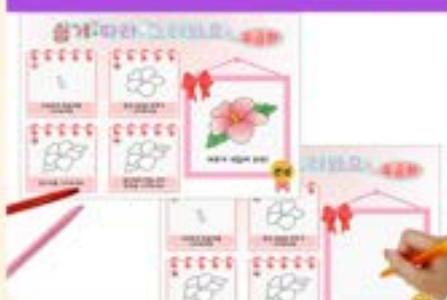
가랜드



만들기



활동지 · 교구재



환경구성



매주 새로운 도안 및 이미지가 업로드 됩니다.

이미지페이지 + 폰트 연간 이용권 (1user) 66,000원

이미지페이지에서 폰트와 이미지를
저작권 걱정없이 자유롭게 이용해보세요!

보시래기체

보시래기처럼 동글동글 0123456789 abvde

폼로췌체

호늘로 토끼는 귀여움 0i23456789 abvde

여름곤망이체

야옹야옹 곤망이는 내친구 0123456789 abvde

틀립체

싱그러운 틀립 한송이 0123456789 abvde

추후 새로운 폰트가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이미지페이지 폰트 사용범위

사용 가능	사용 불가
사용 불가 항목 외 모두 사용가능	폰트 재판매 폰트 변형 재배포 폰트가 포함된 물건 판매
<small>*기관에서 수업 행사에서 사용할 수 있음</small>	

인터넷 검색창에 이미지페이지를 검색해보세요

www.imagepage.co.kr 02-6925-5381



• 아이들을 누리는

이 과잉 양육

• 평등한 첫걸음

